

제369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4 호

국회 사무처

2019년7월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상정된 안건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1

(10시02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자면 저는 ‘불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국민들은 이런 장밋빛 구호들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칼칼 쏟아져 나오는 붉은 수돗물은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재난입니다. 은명초 화재 사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

은 비극적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언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또 세금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전기료, 보험료가 폭등할지 모릅니다. 경제 위기는 삶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기업들도 비관에 빠져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폭풍 앞에 기업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최악의 한일 관계는 통상 보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기업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릅니다.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웠습니다.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입니다.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다’, 지난 스웨덴 연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6·25는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침략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국방부가 북한과 6·25 70주년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김원봉 서훈으로도 모자라 이제 6·25 전쟁의 역사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공포심이 학계, 공직사회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태양광 비판 재방송을 대놓고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막습니다. 태양광 비판 방송

제작의 사과 방송까지 강요했습니다. 신문에 정권 비판 칼럼을 쓴 언론인에게는 심지어 ‘토착왜구’라는 모욕까지 가했습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 그것은 정권을 찬양하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국민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불안합니다. 좀처럼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긴 터널을 대한민국은 달리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가 이 불안을 극복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올바른 정치를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치,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정치란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예술입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입장을 좁혀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없고 정치가 없어야 할 곳에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 과잉, 정치 실종 이것이 지금의 위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4월 우리는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패스트트랙 폭거입니다. 그것은 정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입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의 칼을 숨겨 뒀습니다.

민주주의의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지난 패스트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약속을 받아 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달 28일 3당 교섭단체 합의였습니다. 이제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었던 것입니다.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 같습니다.

최악의 정치 혼란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 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 얼마 가지 않아 무참히 꺾였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 비판 세력에 대한 입막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잡니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합니다.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를 반복해 왔습니다.

절대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히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 가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거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제1야당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입니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빠루와 해머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합니다.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최근 남·북·미 정상회담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

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다 좋습니다. 북한이 핵만 포기한다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북핵 폐기, 시작도 안했습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단거리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 하는 객, 손님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했습니다. 선부론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뿐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 지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입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했습니다.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자유한국당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리고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평화입니까?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상태, 그것이 곧 평화입니다. 자유가 없는 평화, 그것은 노예 평화 그리고 거짓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곧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입니다.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곧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을 관철하십시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십시오.

한일 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되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축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 보복을 철회하십시오. 정치적 갈등을 경제 보복으로 가져가는 것, 자유무역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면적으로 대일외교를 재검토하십시오.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 외교, 갈등 외교로 한일 관계를 파탄

냈습니다.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 보복을 예고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던 외교부장관, 이제 와서 연구 중이라며 묵묵부답입니다. 청와대는 산업부 핑계를 대고 산업부는 기업 핑계를 댁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대로 일본의 통상 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민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것입니다. 무능 외교가 민생과탄마저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가 필요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다채널 외교가 시급합니다. 즉각 긴급 의회외교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노동 개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친노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친노조·친민노총 그리고 반노동 정책입니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합니다. 고용 세습, 채용 및 승진 비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친노조·반노동 정부입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거대 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인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합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습니다.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됩니다.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각종 개혁 과제가 노조의 의사에 의해 무산되어서도 안 됩니다.

강성노조가 아닌 책임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권익노조가 되도록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노동 개혁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넓은 노동법규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합니다.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됩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 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 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합니다.

일할 권리 보장법으로 주 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 알바 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일할 자유를 위한 법 개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 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그 자유 경제의 길, 자유한국당이 열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자체가 기업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부를 탐욕의 산물로 규정합니다.

광범위한 기업 탄압과 별건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경영 간섭이 반복됩니다. 어느 기업인이 투자와 신규 고용에 나서겠습니까? 기업 엑소더스,

반기업이 불러온 필연입니다.

이제 우리는 친기업·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애국자로 보는 시각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기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국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 기업인들을 추켜세우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씩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와 악법 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 주겠습니다.

일할 자유,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 이제 경제의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자유가 곧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생태계 교란입니다. 그 기저에는 시장 불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는 일자리, 성장, 분배를 모두 잃었습니다. 주 52시간의 무리한 적용은 일할 기회마저 뺏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정해 주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치명적 자만은 경제의 치명적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합니다.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입니다.

문 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입니다.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습니

다. 급격하게 고갈되어 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산 뒤 그 뒷감당은 국민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문 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 줍니다.

우리 당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기금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적립금은 사용 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 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습니다. 통계 조작 세금 일자리 예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은 모두 걸러내야 됩니다. 또한 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복지, 지속 가능한 국가가 가능합니다.

재정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합니다. 국민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R&D, 국가기반시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큼 다가온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제도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중에도 교실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던 위대한 국민성이 있었기에 지금의 번영과 풍요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은 필수입니다. 획일적인 교육은 미래의 인재를 길러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자사고 죽이기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획일주의에 의한 자율과 창의의 말살입니다. 전북 상산고의 경우 교육감의 전횡은 거의 독재 수준입니다.

운동에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 훈련의 기회를 주고,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 교습의 기회를 주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에게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의 기회를 주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

까?

우리 공교육은 위기입니다.

교실 붕괴, 잠자는 교실, 이미 오래된 현실입니다. 경쟁과 자율이 없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공교육 대개혁이 시급합니다.

최소한의 자율을 가진 자사고마저 없애겠다는 것 그것은 역주행의 교육정책입니다. 오히려 자사고 같은 학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공교육에는 경쟁의 가치를 불어넣어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원평가제의 내실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부담의 완화는 역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이를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은 이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공공 서비스들을 라이프 라인(life line), 생명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와 전기라는 대표적인 생명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씻는 데 쓰는 물이 수돗물입니다. 갓난아이를 씻기는 물도 수돗물입니다. 그런 수돗물이 붉은 수돗물이 되어 나오는데 문제인 정부, 대책 마련은커녕 원인 규명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우리 상하수도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무시무시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없고, 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그것이 바로 이 정부의 성격을 설명하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 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보장만큼은 큰 정부가 요구됩니다. 온수관 파열, 싱크홀, 통신구 화재 등 노후화된 시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10조씩 투자해서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생명안전 인프라 뉴딜을 제안합니다. 국민 세금,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인프라 역시 이 정권의

미신적 논리에 치참히 무너집니다.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국보급 인재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과 미래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태양광 마피아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고 전국의 국토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에 활취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해 놓고 그 원전의 5년짜리 하도급 계약을 따는 데 그쳤습니다. 탈원전 하겠다는 정부를 누가 믿고 어느 나라가 자국 원전 정비 독점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해 왔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이미 눈덩이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기요금마저 깎아 준다고 합니다. 결국 3000억 원 적자를 추가로 떠안아야 합니다. 그 돈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국가기반시설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립니다. 여론 무마용으로 선심성 정책을 낱발하고 몰래 국민 세금으로 갖다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애초부터 탈원전 자체를 포기했으면 될 일입니다. 전력만 풍부하면 전기료 인상도, 여름철 전력난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원전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6개월 200만 원짜리 미세먼지 감시단을 뽑는 것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입니다. 재해재난 대책마저도 일자리 착시를 위해 동원하는 정부, 애초에 국민 안전에 무관심, 무감각한 정부입니다.

이 정권의 조작·은폐 본능은 최근에도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 통계 조작해서 일자리 착시 유발합니다. 대통령 딸 부부 의혹 철저히 숨기고 심지어 의혹을 제기하면 보복까지 가합니다.

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 우리 경계 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축소 정황마저도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셀프 면죄부 조사에 불과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집필자를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도장을 훔치는 문서 조작까지 사주했습니다. 이는 학자의 양심을 훔친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다른 교과서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집필, 출판, 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로 현재 배포된 해당 교과서를 전량 수거해서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느 정권도 100% 성공만은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부나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늘 어느 정부나 실수를 합니다. 지금껏 위기를 겪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있기에 정부와 여당은 오판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외교, 안보, 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에서 위기 돌파의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불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시장과 기업을 신뢰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알바 일자리만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눈에 보이는 비핵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를 남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를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감상적 민족주의 외교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국익 중심의 외교를 말합니다.

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문희상 나경원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 의원(258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광립	김광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성환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정훈	김종민
김종희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엄용수	여영국	오신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상현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성호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인화	정점식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웅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평)	최교일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영철	황희		

○개의 시 재석 의원(191인)

강길부	강석호	경대수	고용진
-----	-----	-----	-----

곽대훈 권미혁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태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중로 김철민 김태흠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박경미 박광운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인숙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혜련 서삼석
 서청원 서형수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연석 송희경 신동근 신보라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엄용수 여영국 오신환 오영훈
 우원식 원유철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영석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원욱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학재
 이철희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이해찬 이훈 임이자 임종성
 이후삼 이제원 전해철 전현희
 장석춘 장갑윤 정성호 정양석
 전희경 정우택 정점식 정중섭
 정용기 정춘숙 제윤경 조경태
 정진석 정춘현 제주광 주승용
 조정식 조훈현 주진영 채이배
 주호영 조진현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표창원 함진규 홍의락
 홍철호 황영철 황희
○산회 시 재석 의원(220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광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광림 김광수 김기선 김도읍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태 김성환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희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박경미 박광운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범계 박선숙
 박성중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정현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현 송언석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엄용수 여영국
 오신환 오영훈 위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재중 윤관석
 윤소하 윤영석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상돈 이상현 이원욱
 이석현 이수혁 이영주 이원욱
 이은권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종배 이주영 이종명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학재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정숙 장제원 전해철 전현희
전희경 정갑윤 정성호 정용기
정우택 정인화 정점식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제윤경 조경태
조승래 조원진 조웅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진선미
진영 채이배 최경환(평) 최교일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희

○출장 의원(5인)

김영춘 성일종 오제세 정태욱
지상욱

○청가 의원(25인)

강석진 강훈식 김경진 김관영
김규환 金成泰 김종석 김중훈
김현권 민홍철 박순자 박재호
변재일 송영길 심재권 이채익
이태규 전해숙 정병국 정세균
정재호 최도자 홍영표 홍일표
황주홍

○국회 참석자

입법차장 한공식
의사국장 권영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외교부장관 강경화
통일부장관 김연철
법무부장관 박상기
국방부장관 정경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환경부장관 조명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보고사항】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법제사법	조웅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2019. 7. 4.
기획재정	이원욱	김영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이철희	이원욱		
국토교통	김영진	조웅천	자유한국당	
법제사법	정갑윤	김진태		
정무	김진태	정갑윤		

○의안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김선동·민경욱·추경호·성일종·정태욱·장석춘·정갑윤·김재경·권성동·김용태·신보라 의원 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정점식·박덕흠·김명연·강석호·최교일·전희경·이만희·정태욱·김재원·윤종필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정점식·박덕흠·강석호·전희경·이만희·정태욱·김재원·최교일·윤영석·윤종필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이찬열·주승용·전혜숙·유승희·황주홍·김철민·이동섭·김광수·천정배·김진표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이찬열·주승용·전혜숙·유승희·황주홍·김철민·이동섭·천정배·장정숙·김광수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이찬열·김철민·전혜숙·윤후덕·김삼화·이동섭·황주홍·박찬대·김광수·위성곤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이종배 · 곽대훈 · 김석기 · 정진석 · 성일중 · 이동섭 · 추경호 · 김상훈 · 윤종필 · 박명재 · 김명연 의원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김성원 · 김명연 · 김영우 · 김정재 · 박덕흠 · 박인숙 · 안상수 · 염동열 · 이만희 · 이은권 · 정유섭 · 함진규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오영훈 · 강창일 · 송갑석 · 정인화 · 인재근 · 이찬열 · 김현권 · 노웅래 · 김종희 · 우원식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윤일규 · 신동근 · 조승래 · 서영교 · 김병기 · 이석현 · 기동민 · 안호영 · 윤호중 · 정춘숙 · 안민석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이수혁 · 김종대 · 윤후덕 · 이후삼 · 이정현 · 전재수 · 박경미 · 고용진 · 이재정 · 안규백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박범계 · 송갑석 · 김정호 · 고용진 · 이종걸 · 황희 · 심재권 · 이원욱 · 임종성 · 조승래 의원 발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이수혁 · 고용진 · 김종대 · 박경미 · 안규백 · 윤후덕 · 이재정 · 이정현 · 이후삼 · 전재수 의원 발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이수혁 · 고용진 · 김종대 · 박경미 · 안규백 · 윤후덕 · 이재정 · 이정현 · 이후삼 · 전재수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이수혁 · 고용진 · 김종대 · 박경미 · 안규백 · 윤후덕 · 이재정 · 이정현 · 이후삼 · 전재수 의원 발의)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이수혁 · 고용진 · 김종대 · 박경미 · 안규백 · 윤후덕 · 이재정 · 이정현 · 이후삼 · 전재수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강효상 · 박덕흠 · 함진규 · 성일중 · 김기선 · 김상훈 · 임이자 · 이장우 · 김현아 · 송희경 · 김성원 · 백승주 · 박성중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김상훈 · 윤영석 · 이종배 · 김승희 · 정태욱 · 주호영 · 윤재욱 · 김명연 · 박명재 · 성일중 의원 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이수혁 · 고용진 · 김종대 · 박경미 · 송영길 · 안규백 · 윤후덕 · 이재정 · 이정현 · 이후삼 · 전재수 의원 발의)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이명수 · 김성원 · 유민봉 · 김명연 · 박덕흠 · 윤종필 · 박명재 · 김성찬 · 성일중 · 홍문표 · 김승희 · 김선동 · 이은권 의원 발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이수혁 · 고용진 · 김종대 · 박경미 · 안규백 · 윤후덕 · 이재정 · 이정현 · 이후삼 · 전재수 의원 발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이수혁 · 고용진 · 김병기 · 김종대 · 박경미 · 안규백 · 윤후덕 · 이재정 · 이정현 · 이후삼 · 전재수 의원 발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이수혁 · 고용진 · 김종대 · 박경미 · 안규백 · 윤후덕 · 이재정 · 이정현 · 이후삼 · 전재수 의원 발의)

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이수혁 · 고용진 · 김종대 · 박경미 · 안규백 · 윤후덕 · 이재정 · 이정현 · 이후삼 · 전재수 의원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이수혁 · 고용진 · 김종대 · 박경미 · 안규백 · 윤후덕 · 이재정 · 이정현 · 이후삼 · 전재수 의원 발의)

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조원진 · 홍문종 · 박대출 · 윤상직 · 서청원 · 이주영 · 김진태 · 김규환 · 박덕흠 · 김태흠 · 정중섭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정재호 · 김상희 · 김영진 · 윤관석 · 백재현 · 전혜숙 · 김병기 · 김해영 · 신경민 · 홍영표 · 서영교 · 권칠승 · 박홍근 · 박광온 · 이춘석 · 김철민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박완수 · 박덕흠 · 신상진 · 성일종 · 김성찬 · 추경호 · 정운천 · 정갑윤 · 송석준 · 원유철 · 조경태 · 유기준 의원 발의)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이수혁 · 고용진 · 김종대 · 박경미 · 안규백 · 윤후덕 · 이재정 · 이정현 · 이후삼 · 전재수 의원 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이수혁 · 고용진 · 김종대 · 박경미 · 안규백 · 윤후덕 · 이재정 · 이정현 · 이후삼 · 전재수 의원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이수혁 · 고용진 · 김종대 · 박경미 · 안규백 · 윤후덕 · 이재정 · 이정현 · 이후삼 · 전재수 의원 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이수혁 · 고용진 · 김종대 · 박경미 · 송영길 · 안규백 · 윤후덕 · 이재정 · 이정현 · 이후삼 · 전재수 의원 발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이수혁 · 고용진 · 김종대 · 박경미 · 송영길 · 안규백 · 윤후덕 · 이재정 · 이정현 · 이후삼 · 전재수 의원 발의)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김세연 · 김경진 · 유승민 · 이동섭 · 김재경 · 윤소하 · 윤일규 · 신상진 · 윤종필 · 전혜숙 · 박인숙 · 김명연 · 김승희 · 김병욱 · 유재중 · 김순례 · 남인순 · 오제세 · 심상정 · 이종걸 · 기동민 의원 발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정재호 · 홍영표 · 백재현 · 서영교 · 전혜숙 · 권칠승 · 박홍근 · 박광온 · 홍익표 · 이춘석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김상희 · 윤소하 · 이재정 · 정춘숙 · 맹성규 · 원혜영 · 기동민 · 신창현 · 한정애 · 서영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김정우 · 강병원 · 김두관 · 윤후덕 · 윤준호 · 원혜영 · 조정식 · 이원욱 · 심기준 · 김경협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최재성 · 김경협 · 백혜련 · 서영교 · 박완주 · 신창현 · 정재호 · 제윤경 · 김병기 · 이석현 · 박찬대 · 조승래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최재성 · 김경협 · 권미혁 · 서영교 · 박완주 · 신창현 · 김민기 · 정재호 · 맹성규 · 제윤경 · 김태년 · 김병기 · 기동민 · 이석현 · 박찬대 · 송갑석 · 유동수 · 조승래 · 이규희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최재성 · 김경협 · 박완주 · 신창현 · 정재호 · 이석현 · 박찬대 · 조승래 · 김영호 · 맹성규 · 제윤경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최재성 · 김해영 · 김경협 · 백혜련 · 서영교 · 박완주 · 신창현 · 김민기 · 정재호 · 맹성규 · 제윤경 · 김태년 · 김병기 · 이석현 · 박찬대 · 송갑석 · 조승래 의원 발의)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최재성 · 신창현 · 정재호 · 제윤경 ·

김병기 · 서삼석 · 윤준호 · 김병관 · 김상희 · 김영춘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오신환 · 최도자 · 김수민 · 임재훈 · 유승민 · 하태경 · 이혜훈 · 이동섭 · 유의동 · 정운천 · 권은희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이양수 · 추경호 · 송희경 · 김승희 · 안상수 · 김성원 · 주광덕 · 송언석 · 조경태 · 김현아 · 엄용수 · 이만희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윤일규 · 서영교 · 이석현 · 안호영 · 윤호중 · 정춘숙 · 안민석 · 김철민 · 강훈식 · 제윤경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최재성 · 김경협 · 박완주 · 신창현 · 정재호 · 제윤경 · 김병기 · 이석현 · 박찬대 · 조승래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정동영 · 유성엽 · 김광수 · 장진숙 · 송영길 · 홍의락 · 주승용 · 김중희 · 최도자 · 조배숙 · 정인화 의원 발의)

이상 47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9. 7. 4. 오신환 · 나경원 · 이인영 의원 외 261인으로부터 정치 · 외교 · 통일 · 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7월 9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

국무총리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2019. 7. 4. 오신환 · 나경원 · 이인영 의원 외 261인으로부터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7월 10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 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

(2019. 7. 4. 오신환 · 나경원 · 이인영 의원 외 261인으로부터 교육 · 사회 · 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7월 11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법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

○예비심사기간 지정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4. 25. 정부 제출)

7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환경노동 · 국토교통)에 예비심사기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함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0건 2019. 4. 25. 정부 제출)

이상 20건 7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환경노동 · 국토교통 · 여성가족)에 예비심사기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각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함

○요구서 제출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에 대한 청와대 · 교육부 등 관계기관 불법 ·

부당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19. 7. 3. 이학재·김한표 의원 외 109인
요구)